

의안번호	제3024호
의결	2025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#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2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
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규정 삭제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수량 삭제

(안 제5조제1항)

나.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함

(안 제5조제2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9조

나.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4(2025. 9. 5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13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9. 1.~2025. 9. 2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 타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
- 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- 다. 전몰군경 유족
- 라. 전상군경
- 마. 전상군경 유족
- 바. 무공수훈자
- 사. 보국수훈자
- 아. 독립유공자 유족
- 자. 공상군경
- 차. 공상군경 유족
- 카. 순직군경 유족
- 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제5조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참전유공자
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

3. 보훈격려금: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

4. 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군수는 예산의 <u>범위 내에서</u>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<u>따른</u>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, 보훈격려금 등 (이하 “보훈명예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보훈명예수당	1. -----
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5만 원</u>	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
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5만 원</u>	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다. 전몰군경의 유족: 월 10만 <u>원</u>	다. 전몰군경의 유족
라. 전상군경: 월 10만 원	라. 전상군경
마. 전상군경 유족: 월 10만 <u>원</u>	마. 전상군경 유족
바. 무공수훈자: 월 10만 원	바. 무공수훈자
사. 보국수훈자: 월 5만 원	사. 보국수훈자
아. 독립유공자 유족: 월 10만 <u>원</u>	아. 독립유공자 유족
자. 공상군경: 월 10만 원	자. 공상군경
차. 공상군경 유족: 월 10만 <u>원</u>	차. 공상군경 유족

<p><u>카. 순직군경 유족: 월 10만 원</u></p> <p><u>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월 10만 원</u></p> <p>2. <u>사망위로금</u></p> <p><u>가. 참전유공자: 50만 원</u></p> <p><u>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: 50만 원</u></p> <p>3. <u>보훈격려금: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 각 5만 원</u></p> <p>4. <u>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 60리터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카. 순직군경 유족</u></p> <p><u>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</u></p> <p>2. -----</p> <p><u>가. 참전유공자</u></p> <p><u>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(이하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”라 한다)</u></p> <p>3. <u>보훈격려금: 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</u></p> <p>4. <u>쓰레기종량제봉투: 매월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,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
---	---

**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가. 관련 조문: 안 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제1항  
나. 비용발생 요인: 보훈명예수당 지급

**2. 비용추계의 결과**

**가. 추계의 전제**

-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904명

(2025. 8. 기준)

합계	6.25 참전 유공 자	월남 참전 유공 자	참전 유공 자배 우자	전상 군경	공상 군경	보국 수훈 자	전몰 군경 유족	전상 군경 유족	순직 군경 유족	공상 군경 유족	독립 유공 자 유족
904	46	241	312	1	47	33	43	131	20	18	12

**나. 추계의 결과**

- 1) 2026년: 1,562,640천 원

구 분	인원(명)	산출 내역	소요예산(천 원)
계	904		1,562,640
6.25, 월남참전유공자	287	287명×180천 원×12월	619,920
참전유공자배우자 외 7개	584	584명×130천 원×12월	911,040
보국수훈자	33	33명×80천 원×12월	31,680

- 2) 2026년~2030년 추계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합계
세출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	7,316,400
군비						

**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~2030년 일반회계로 편성**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합계
의존재원	-	-	-	-	-	-
재원 조달						
자체재원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	7,316,400
기 타	-	-	-	-	-	-
소 계	1,562,640	1,512,960	1,463,280	1,413,600	1,363,920	7,316,400

**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**



**■ 국가보훈 기본법**

**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 
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 
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 
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 
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  
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  
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예우 및 지원)**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 
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 
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 
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